

# “전북, 정치적 거래 대상 아니다”

### 민주안호영 의원, ‘도지사 공천권 검토 대상 포함’ 언론 보도에 지도부 해명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민주당·무주)이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 지도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민주당 사무처의 합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내용은 의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거론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선택하는 권한은 어떤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전북을 중앙 정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오만한 인식과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전북 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며 “전북을 단연한 표창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발전 공약 역시 공허한 말 잔치

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향해 “해당 문건의 성격과 공천권 검토 의혹에 대해 도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이

라면 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는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신뢰와 원칙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 의원은 “현 지도부의 판단과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불안감이 당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당의 결정 과정이 충분한 공감과 신뢰를 얻고 있는지 지도부는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북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며 민주당의 심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전북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낼 책임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오직 전북도민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도민과 함께 당당한 도약의 길을 책임 있게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선언한 상태로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는 13일 까지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01만호 기자

# “주택건설 기준 현실화 제도 개선”

### 김윤덕 국토부장관

주택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9일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 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대해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에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선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공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권희성 기자

# 도, ‘올해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 선포 | AI로봇 실증 등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 구축

### 농업 · 건설 · 투드테크 · 물류로 산업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을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으로 선포하고 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대한민국 AI로봇 실증·산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AI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비용 상승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로봇·AI 중심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글로벌 로봇시장은 2021년 282억 달러에서 2030년 881억 달러로 3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중앙부처와 협력해 자유로운 연구개발과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기반 실증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피지컬 AI 실증 밸리를 중심으로 AI로봇 핵심 지정을 추진해 실증 특례와 규제 완화를 적용함으로써 기술의 현장 검증과 산업 확산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먼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협업자’ 기반 피지컬 AI 실증 밸리를 중심으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실제 산업 환경을 구현한 실증 메타팩토리를 조성해 연구실 기습이 즉시 현장 검증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김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2027년까지 1,069억원) △남원 스마트 APC AI로봇 실증센터 △새만금 해양 무인로봇 실증 테스트베드(2027년까지 214억원) 등 산업별 특화 실증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들어간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 등 교육 인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 AI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대한민국 AI로봇 실증·산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를 확충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실습·취업 선순환 구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산업 확산 측면에서는 농업·건설·푸드테크·물류 등 4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김제를 중심으로 스마트팜과 AI 기반 지능형 농업로봇 국가산업단지를 2033년까지 완성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427억 원을 투입해 용접·도장 등 고위험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시스템 개발·실증한다.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해 AI로봇 기반 커스텀 푸

드 실증·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물류 분야에서는 새만금 자유주행 실증지역과 연계해 산업단지-항만-공항을 잇는 무인 자율운송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도는 이와 함께 AI로봇 핵심부품·시스템 분야의 선도기업 유치와 AI로봇 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스케일업을 지원하고,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상생협력 플랫폼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국 자동차 생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특장차와 농기계 산업이 집적된 다품종·소량 생산 기반을

보유해 유연·맞춤형 로봇 산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강점을 지녔다. 특히 새만금은 산업부지, 항만 전력공급 등 제조-조립-시험-물류 시설이 집적돼 최적의 기업 입지 조건을 갖췄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전략은 AI로봇 기술을 실증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전주기 모델 구축에 의의가 있다”라며 “전북을 대한민국 대표 AI로봇 실증·산업화 거점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01만호 기자

# 임실지역 도로 개선 ·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

### 한득수 민주 농어민위 부위원장, 국토부에 건의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한득수 부위원장이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임실군 도로 개선과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총 1,255억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했다.

한 부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육정호 순환도로(지방도 717호) 국지도 승격 및 연장 개설(1,000억원) △국도 30호선 오정리~삼거리 구간 4차로 확장(145억원) △관촌면 오원삼거리 교차로 개선(10억원) 등 도로 관련 3개 사업(총 1,155억원)을 제안했다. 육정호 순환도로는 일부 미개설 구간과 급경사·급커브로 통행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도 30호선 오정리~삼거리 구간 4차로 확장이 요구되며, 오원삼거리 역시 가·감속차로 부족으로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부위원장은 농촌 공공건



축물 20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과 생활SOC 복합 기능을 결합한 100억 원 규모의 농촌형 그린리모델링 선도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한 부위원장은 “임실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관련 국가계획에 사업이 반영돼 군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01만호 기자

# 민주 도당,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윤 위원장과 도당 관계자들은 먼저 양지노인복지관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호성동에 위치한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보호·교육·자립 지원 과정을 살펴보고 세제 등 위문품



을 전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매년 명절마다 전동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며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01만호 기자

# 진보당 도당 “2차 종합특검 인사 참사, 책임 물어야”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정권희)은 9일 강성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2차 종합특검 특검 후보로 쌍방을 김성태 측 변호인이 추천된 데 대해 “황당무계한 인사 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도당은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내란 청산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바라는 도민과 국민의 기대를 배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윤 의원을 향해 “왜 이런

인사가 가능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도민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정청래 대표 역시 특검 추천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독립적이고 엄정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며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01만호 기자

# “위기의 군산 다시 일으켜 세울 것”

### 문승우 도의회 의장, 군산 · 김제 · 부안갑 재선거 출마 선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는 6월 3일 지방자치선거나 함께 실시되는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산 지역 지지자 50여 명이 함께해 뜨거운 응원을 보였다.

문 의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 “위기의 군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국회 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번 재선거의 의미를 국가적·지역적 과제로 나뉘 설명했

다. 그는 “국가적으로는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국가 대전환을 이끌어갈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인물이 필요하다”며 “지역적으로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고 군산을 상생과 도약의 길로 이끌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군산의 상황에 대해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실업은 얼어붙었으며, 산업은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침체된 군산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9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는 6월 3일 군산 · 김제 ·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의장은 군산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세 가지 엔진’도 제시했다.

첫째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약속했다. 둘째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지·보수·정비(MRO) 중심의 조선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로 군산항과 어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

축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도의회 의장과 행정자치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경험을 강조하며 “군산 발전을 위해 갈등을 조정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 앞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일듯 시민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01만호 기자